

증여세 나오자 “엄마가 내 계좌 잠깐 쓴 것”

모친 부동산 매매대금 계좌이체 받아 엔화 송금...부동산 거래 등 17억여원 1심 “증여세 9억여원 정당” 원고 패소

모친이 자신의 명의를 잠깐 빌려 돈 거래를 했을 뿐인데 증여세가 부과됐다며 한 남성이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판사 신명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모친 B씨는 2015년 4월 자신이 소유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 17억여원을 A씨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이를 같은 해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엔화로 송금해 일본 내 부동산 구입, 개인 투자 등에 사용했다.

세무 당국은 A씨가 모친으로부터 받은 돈을 엔화로 송금한 시점에 증여가 성립했다고 보고 2021년 6월 9억여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다.

A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증여세액이 8억8000만여원 수준으로 소폭 감액되는 것에 그쳤다.

이에 A씨는 'B씨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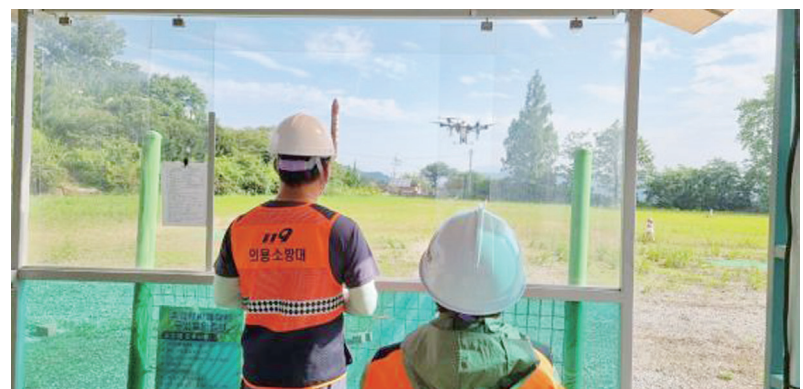
명의를 엔화 송금,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것이고, 은행에서 B씨 명의로 고액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자신의 계좌를 엔화 송금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세무당국 조사 과정에서 일본 내 부동산 취득 주체가 자신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B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차용증은 있으나 A씨가 거기에 기재된 이자를 B씨에게 지급한 적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에서 B씨 명의로 고액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선욱기자



화순소방 의용소방대원, 전남최초 자격 취득

화순소방서는 화순군 의용소방대 위탁교육예산을 활용하여 소속 의용소방대 5명이 전남 최초로 드른 1종 자격을 취득하였다.

화순=박순철기자



해양경찰교육원, 2023년 초등학교원 생존수영 직무연수

해양경찰교육원은 최근 4주간 교육원 내 해양구조 및 모의선박실습장에서 전국 초등학교원 24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등학교원 생존수영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이슬비기자



나주경찰, 농촌지도사회원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나주경찰서는 최근 나주시 산포농협 빗가람지점에서 농촌지도사회원을 대상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무안경찰, 다중운집장소 ‘물지마 범죄 예방’순찰활동

무안경찰은 지난 6일 “길거리 흥기 난동 등 물지마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다중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방범 순찰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 주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이성기기자



여수경찰, '다중밀집지역 강력범죄' 특별방범활동 전개

여수경찰은 지난 6일 밤 이순신광장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자율방범대 등 민간협력단체와 함께 합동순찰을 하며 범죄예방활동을 펼쳤다.

여수=김현근기자



완도해경, 사고선박(어선·부선 등) 대상 현장대응에 총력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6일 진도대교 울돌목 인근 해상에서 진도조력발전소 외부 구조물 및 잔교에 선박들이 연이어 충돌하여 긴급출동하였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5만388명...4급 전환 연기

1주일간 일평균 5만명대 확진...6주 연속 증가

지난 1주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5만38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지난 6월 일상회복 후 처음 5만 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주간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2주째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총 35만2716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3355만 4474명이 됐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388명으로 일주일 전 평균 4만5529명과 비교하면 4859명(10.7%) 증가했다.

날짜별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1일 5만6110명, 2일 6만4167명, 3일 5만5466명, 4일 5만4729명, 5일 5만3052명, 6일 4만8899명, 7일 2만255명이 각각 확진됐다.

지난 2일에는 일상회복 이후 가장 많은 6만 4155명이 확진됐다. 겨울철 재유행 시기였던 지

난 1월4일(7만8541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일상회복 이후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6월 6~12일 1만6438명→6월 13~19일 1만6265명→6월 20~26일 1만6163명→6월 27일~7월 3일 1만7792명으로 2만 명 미만을 유지했다.

그러나 7월 첫 주(4~10일) 2만2815명으로 처음 2만 명대로 올라섰고 7월 11~17일 2만7955명으로 증가한 뒤 7월 18~24일 3만8809명, 7월 25~31일 4만5529명, 8월 1~7일 5만388명으로 6주 연속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1주간 98명 늘어 누적 3만5411명이 됐다. 전주(97명)보다는 1명 증가했다.

날짜별로는 1일 9명, 2일 17명, 3일 18명, 4일 17명, 5일 12명, 6일 14명, 7일 11명이 숨졌다.

감염 후 증세가 악화돼 입원한 위중증 환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214명으로 집계돼 1주 전(179명)보다 35명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 수가 200명

을 넘는 것은 지난 2월19일(205명) 이후 약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이어지자 방역 당국은 유행 추이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9일에 예정됐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등 일상회복 관련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입원병동이 있는 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발표도 미뤘다.

당국은 지난 3일까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이날 중 2단계 일상회복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인 일상회복 시행 시기는 국내·외 유행 상황과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오후 2시 정각 코로나19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1~7일 날짜별 확진자 수 통계 중 오신고된 사례를 제외해 30분여 만에 수정했다.

이슬비기자

아동 성범죄 전과자도 출소 20년 뒤 공무원 될 수 있다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아동 성범죄 전과자도 출소 20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현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원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도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간 임용이 제한된다. 20년 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예기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헌법상 공무원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현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려면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양육 환경을 고려해 인사상 우대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과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의 선발 방식은 다양화한다.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

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위 해제자의 결원보충 제한 기간은 3개월로 단축한다.

현재는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처분 결과 통보 규정도 정비한다.

김 처장은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뜨거운 도로 식혀주는 '쿨링로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7일 서울 세종대로에 설치된 쿨링로드에서 지면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이 분사되고 있다.

오유나기자

광주서 프로야구 관람객 파울볼 맞아 잇따른 부상

광주에서 프로야구 관람객들이 파울볼에 맞아 석달 새 잇따라 부상을 입었다.

7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8분께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A(48·여)씨가 관중석으로 날아온 야구공에 얼굴을 맞았다.

머리에 찰과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KIA와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 중 파울볼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는 지난 6월 28일과 19일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B(31·여)씨와 C(5)군도 파울볼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오유나기자